



유럽의회, 탄소 중립을 위한 유럽기후법 승인

손민숙 연구원

요약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음. 2021년 6월 EU는 유럽 기후법을 승인하여 탄소중립 합의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7월 유럽그린딜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입법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함. EU의 기후법은 '법 위의 법'으로서 향후 EU 규제의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 산업별로 적절한 사업전략 마련이 필요함

○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Carbon Neutral)'¹⁾을 선언하고 있음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금융리스크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위기가 코로나19를 능가하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²⁾
- 각 국가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포함한 법안을 채택하거나 준비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
- 영국, 유럽, 일본, 미국 등 25개국이 공식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됨³⁾
- EU 회원국 중 9개국이 장기적 목표를 포함한 기후법을 채택하였으며, 그 외 유럽 국가에서도 기후법을 채택하거나 준비 중임⁴⁾

〈표 1〉 유럽 내 기후법 채택 현황

기후법 채택	기후법 준비 중
• 장기적 목표 포함: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영국 • 장기적 목표 불포함: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몰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 준비 중: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 고려 중: 벨기에

자료: Ecologic(2020. 2), "Climate Laws in Europe"를 참조하여 업데이트함

1) '기후 중립(Climate neutral)' 또는 '넷제로(Net Zero)'와 같은 개념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를 상쇄할 수 있는 제거 대책을 세워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함. 제거 방안으로는 숲 또는 습지 조성,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장기술 등이 있음
 2) Lexology(2021. 7. 15), "EU 'Fit for 55' package: implications for clients"
 3) 기획재정부(2021. 7. 14), 「한국판 뉴딜 2.0」
 4) Ecologic(2020. 2), "Climate Laws in Europe"

- 2021년 6월 24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EU내 정치적 약속에 불과했던 탄소중립에 관한 합의가 법적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전환됨⁵⁾
 - EU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과 파리기후협정을 이행하고,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제시하는 등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함
 - 유럽그린딜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약속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3월 4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기후법 입법안⁶⁾을 채택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함
 - 유럽 기후법은 이사회와 의회의 잠정적 합의를 거쳐 2021년 6월 24일 승인되었으며, 2030년까지 EU의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EU는 유럽그린딜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2021년 7월 14일 광범위한 입법 패키지인 '핏포55(Fit for 55)'를 함께 발표함⁷⁾
 - 해당 패키지에는 재생 에너지 관련 목표, 탄소 관련 시장 및 조세 제도 개정, 보다 엄격한 탄소 배출 제재 등 13가지의 입법안이 포함됨
 - 입법안 중 탄소국경조정제도(CBAM),⁸⁾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EU ETS),⁹⁾ 자동차 산업 관련 입법안의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 새롭게 도입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고탄소 수입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으로 EU지역 내수시장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3년부터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 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EU지역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각 나라별로는 연간 미국 35억 4,100만 달러, 인도 24억 1,500만 달러, 터키 15억 9,500만 달러, 한국 10억 6,100만 달러의 금액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됨¹⁰⁾
 -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EU ETS)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해운, 항공, 육상운송 및 건축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운송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1%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자동차에 대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5%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2035년 이후 휘발유 또는 디젤과 같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함
 - 자동차 산업이 전기 또는 수소차량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내연기관 기술 세계 1위 기업인 메르세데스벤츠가 2030년까지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선언¹¹⁾한 것은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함

5) European Parliament(2021. 6. 24), "EU Climate Law: MEPs confirm deal on climate neutrality by 2050"

6) European Commission(2020. 3. 4),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999(European Climate Law)"

7) European Council(2021. 7. 14), "Fit for 55"

8)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일명 '탄소국경세'라 함

9)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받은 국가나 기업이 남은 할당량을 사고팔 수 있게 한 제도임. EU가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시행 중임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1. 7),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11) Reuters(2021. 7. 23), "Mercedes-Benz hits accelerator in e-car race with Tesla"

〈표 2〉 Fit for 55 주요 내용

개정된 법률	새롭게 제안된 법률
•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EU ETS) • 토지 이용, 이용 변경, 임업 부문 규정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 감축 목표 노력 분담 규정(Effort Sharing Regulation) • 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 에너지 효율 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 • 에너지 과세 지침(Energy Taxation Directive) •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Directive) • 자동차 및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규정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기후 관련 사회적 펀드 마련 • 친환경 항공 연료 사용(ReFuelEU Aviation) • 친환경 해운 연료 사용(FuelEU Maritime) • 새로운 EU 산림 계획 수립

자료: European Council(2021. 7. 14), "Fit for 55"

- EU의 기후법은 27개 회원국 간의 합의가 과제로 남아 있으나, 법안이 발효되는 경우 '법 위의 법(law of laws)'으로서 향후 EU 규제의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¹²⁾ 각 산업별로 기후위험의 재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탄소중립에 맞는 적절한 사업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¹³⁾

12) Reuters(2021. 6. 24), "Climate 'law of laws' gets European Parliament's green light"

13) Lexology(2021. 7. 15), "EU 'Fit for 55' package: implications for clients"